

POLITICS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12·29여객기참사피해지원특별법’ 제정 착수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방공기업, 타지역서 사업가능 지자체 간 상호 합의 전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으면 소속 지방공기업들이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예컨대 A지자체의 공기업은 A지자체 관할구역에서만 사업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A지자체와 B지자체가 합의하면 A지자체 공기업이 B지자체 관할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특별지자체 및 폐기시설 등 지자체 연계사업 시 개정법의 적용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의 단편적용사업이 기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업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그간 민간 사업자가 수행했던 도서 지역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 운송이다.

개정법엔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신설·운영, 지방공기업 회계 부정 처벌 근거 신설, 사업별 예산제 도입 등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돼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온라인 ‘특특 상담소’ 서비스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중

사자와 이용자, 사회서비스 기관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온라인 특특 상담소’를 개설했다. 개설된 ‘온라인 특특 상담소’는 인권, 노무,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회서비스 중사자들은 이를 통해 노무 문제, 인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특특 상담소’는 광주사회서비스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 후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국회 특위, 관련 법안 5건 소위 넘겨 문금주·서삼석·전진숙 등 대표발의

여야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민주당 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 5건을 상정했다. 제정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지만 특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특별법안은 ‘특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 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돼 본격 논의된다.

권영진 위원장은 특별법안 상정에 앞서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소위 위원들은 유가족 의견과 공청회에

서 제기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단을 국회 집무실에서 면담하고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별법의 빠른 제정은 이번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또 “현재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거짓말과 모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의장도 여야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로 넘겨진 5건의 특별법안은 모두 여객기 사고 피해자 피해 지원과 생애 지원, 일상 회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충·보상·장충·강진)은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제심의위원회’를 꾸려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하도록 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함께 국가에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다. 권영진

개별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대표 발의한 의원에 따라 다른 부분에 눈에 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충·보상·장충·강진)은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추모사

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조사위원회의 위원 등을 감정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은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종합 시책 마련과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방지 대책과 별도의 처벌규정을 담았고,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이 발의한 법안에는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겼다. 특히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함께 국가에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내년도 국고 확보활동 시동

신규사업 120건 발굴...‘더 위대한 전남’ 신성장동력 기대

전남도가 SOC 사업을 비롯해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는데 내년도 국고 확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남도는 13일 김영록 지사 주재로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열고 2026년 국비 319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조 7217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120건을 보고했다.

전남도는 지난 2년 연속 거둔 국고 9조 원 확보 성과를 넘어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계속사업, 예타 대상사업, 공모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연초부터 수 차례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부처 동향, 대응을 리 등을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첨단전력, 미래 에너지, 농축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 예산확보 전략을 구체화하고 22개 시군의 균형성장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전남도는 5월까지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해 신규사업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지

역 국회의원과의 협력해 현안사업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6~8월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당위성을 중점 설명하고, 9~11월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확보를 위해 국회 대안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새로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은 분야별로 최첨단 전략산업의 허브 도약 분야는 △사용 후 배터리 직접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20억원(총 200억원)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원천기술 개발 63억원(총 450억원) △대용량 이산화탄소(CO2) 액화 및 적하역 기술개발 60억원(총 370억원) △도심항공교통(UAM) 시뮬레이터 활용을 통한 파일럿 양성센터 구축 21억원(총 450억원) 등이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분야는 △출력제한 해소용 압축공기저장장치 기술개발 56억원(총 400억원)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베어링) 시험센터 구축 90억원(총 400억원)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100억원(총 1조 2000억원) △해상풍력 유지보수 기지 구축 타당성 연구 7억원(총 200억원) 등이다.

농수축산업 생명사업 분야는 △첨단 농업 다핵센터 운영 지원 200억원(총

400억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180억원(총 720억원) △국립 김 산업진흥원 타당성 연구용역 2억원(총액 미정) △간척지 활용스마트 수산양식 단지 조성 8억원(총 200억원)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 10억원(총 1200억원) 등이다.

지역발전의 새 기폭제, 대규모 SOC 확충 분야는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예타 통과 및 30억원(총 1조 9326억원)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예타통과 및 30억원(총 1조 5192억원) △고흥~봉래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예타통과 및 200억원(총 5142억원) △무안·여수공항 시설 개선 예타선정 및 100억원(총 1960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은 △광양 공업용수도 사업(총 3023억원) △화순탄광 경제진흥원사업 추진(총 5643억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총 1441억원), 예타 신청예정인 사업은 △여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총 2155억원) △여수관광 수호배관망 구축(총 1500억원) △8주말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총 2900억원) △광양양~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총 3456억원) 등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등록...본격 선거운동

담양평화예술광장 현충탑 참배...19일 선거사무소 개소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가 13일 오전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4·2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담양 평화예술광장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하는 것으로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담양이 존재한다”며 “담양 발전을 위해 애써온 많은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군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종 후보는 군민과 함께하는 ‘동행’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침 6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통시장과 상가, 읍·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저녁에는 퇴근길 인사와 상가 방문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종 후보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며 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더 많은 군민들을 만나 담양의 현실을 직접 듣고 싶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민의 힘이 곧 담양의 힘이다”며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군수’로서 담양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현규 기자 gnnews@gwangnam.co.kr



이재종 후보가 13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메트로홀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와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 제6회 자치분권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대신현, 2025년도 정기총회

회원사 연대·역량 강화 등 4대 역점과제 추진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메트로홀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와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 제6회 자치분권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대신협은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사 연대 및 역량 강화, 정부·국회·

하고 있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사상심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동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 위원장, 대한석탄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날 대신협은 이날 오후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에 앞장 서고 있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

사장단 회의...우수사원 29명 대신협의회상 제6회 자치분권대상 유정복 인천시장 수상

언론단체 대응 강화, 수익 다각화 및 외부 협력 강화, 회원사 연대 및 역량 강화, 임원 및 사무국 운영체계 정비 등을 새해 4대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25 대한민국중소기업박람회’가 공동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비롯한 각종 박람회 및 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권역별 연계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신협 위상 제고와 영향력 강화를 위한 회원사 공동 프로젝트도 함께 협력·추진될 계획이다.

대신협은 또 임기가 만료된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 현 대신협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중석 회장은 현재 한국신문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

협의회상(인천시장)에게 제6회 자치분권대상을 수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무등일보 김중석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전남일보 이재욱 사장, 전북도민일보 신효국 사장, 제민일보 오홍식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매일신문 한인식 사장, 중부일보(강원도민일보 회장) 현 대신협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중석 회장은 현재 한국신문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

대신협은 또 임기가 만료된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 현 대신협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중석 회장은 현재 한국신문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